

회사 압박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버스기사 이례적 산업재해 인정

“4차례 사고 처리 자부담 지시
무리한 합의금 요구 견디지 못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판정
“정규직 전환 댓가 고풍” 진정서
버스회사 배임수재 등 혐의 수사

시내버스 기사의 운행 중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버스기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갑질’이 50대 버스 기사를 극단적 선택 으로 몰고 갔다(광주일보 2021년 6월 23일 6면)는 지적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버스기사의 죽음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버스기사에게 전가하는 일명 ‘사고처리 자부담’ 관행 근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노동계에서도 버스업계를 넘어 노동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 관행이 ‘직장내 갑질’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정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13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는 시내버

스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을 감당하는 문제로 고민하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시내버스 기사 A씨의 유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유족급여청구’ 결과,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판정위원회는 “A씨는 정규직 전환 후 11일 만에 발생한 4차례의 사고처리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사고처리(보험) 말고 개인비용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아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했다.

판정위원회는 또 “고인이 숨지기 전 회사 사고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과 유족과의 문자내역 등에서 기사가 보험처리 건수에 따라 인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버스회사는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 한 바 없다는 주장을 폈었다.

판정위원회는 “A씨가 정규직 전환이 된 지 보름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상상 불이익 등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점을 들어 A씨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정규직으로 채용된 지 보름만에 4차례의 교통사고를 냈고 개인 비용으로 사고를 처리해야하는 문제를 놓고 극심한 정신적인 고

통을 겪던 끝에 ‘미안해, 힘들어서 못하겠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라는 마지막 글을 끝으로 나주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번 판정은 A씨의 사망의 원인을 살펴면서 버스업계의 고질적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해 발생한 질병과의 상관 관계까지 꼼꼼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박영민 노무법인 ‘노동승리’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버스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승객, 충돌 차량 운전자 등의 과도한 합의금 문제 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노무사는 이어 “비정규직 버스 노동자들에게 대한 차별과 버스업계 내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노동당국은 A씨 유족이 버스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댓가로 고풍을 받아 채권 혐의(채용절차법·근로기준법 위반·배임수재 등)로 버스회사측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 받아 수사 중에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모텔 빨리 안 팔면 남편·아들 객사’ 무속인 말에... 3차례 액막이 굿 비용만 2억 8000만원

남편 몰래 매매계약서 체결
아내·무속인 2명 집유 선고

무속인 A(여·59)씨는 지난 2020년 2월 영업 부진, 모텔 대출금·이자 등으로 고민하는 B(59)씨에게 ‘남편 재산이 너무 많아 급사할 기운이 있다, 모텔을 23억원에 빨리 팔지 않으면 마가 끼어 남편과 아들이 객사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는 무서운 생각에 30억원 이하로는 모텔을 처분할 생각이 없는 남편 몰래 A씨와 A씨를 돕는 법사 C씨에게 모텔 매수자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이를 소개로 알게된 모텔 매수자와 10일 만에 모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한 달 뒤인 2020년 3월에 모텔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무리됐다. A씨 등은 비슷한 시기, B씨의 요청을 받아 액막이 굿을 해주고 770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굿을 해준 대가로 각각 1억원, 1억7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와 C씨, B씨를 모두 공범으로 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기 혐의의 경우 굿 대가로 폭리를 취했을지라도, 모텔 매매과정에서 A씨 등이 기망하거나 별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증거가 미흡한 점 등으로 적

용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무속인 A씨 등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도 모텔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가 해당 법인의 목사직 위임을 받은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B씨 혼자 계약을 진행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들어 공모한 게 아니라며 맞섰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A씨 등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제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범행 과정을 함께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짚은 공모 근거는 3가지로, B씨에게 ‘모텔을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남편이 객사한다’며 모텔을 처분할 생각을 굳히도록 한 점, 남편 동의 없이 모텔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의 신분증이 없다’는 B씨 말을 듣고 ‘알아서 구해보라’는 식으로 답변하는가 하면, 매매 의사를 확인하려는 법무사와 전화 통화할 때 법사 C씨에게 B씨 남편 행세를 하도록 한 점 등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 등으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00~200시간의 사회봉사량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B씨에 대해 A씨와 가벌성(처벌 수위)이 같은 정도로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세월호 8주기 국민 바람 담은 노란색 깃발 걸린다

팽목항·목포신항 일대서 ‘기억-있다’ 캠페인

세월호 8주기를 앞두고 전 국민의 바람을 담은 노란색 깃발이 팽목항과 목포신항 일대에 걸린다.

12일 416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세월호 8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과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은 노란색 현수막을 게시하는 ‘기억-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전 국민의 바람을 접수받아 바닷바람 탓에 찢기고 빛바랜 현수막을 새롭게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8일까지 메시지를 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시민들이 노란색 현수막에

들어갈 문구를 직접 선택해 보내주면 된다.

416연대는 접수받은 문구를 현수막에 적은 뒤 오는 3월 26일 팽목항에서 진행되는 ‘우리는 여전히 팽목에 갑니다’ 행사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단체는 오는 26일 서울시청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출발해 오후 3시에 팽목항으로 이동, 시민들이 신청한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416연대 관계자는 “이번 현수막 게시 행사는 세월호 8주기를 맞아 세월호를 기억하고자 하는 전 국민들의 바람을 표현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흥 다섯살 조카 폭행 치사 고모 엄벌해 달라” 국민청원

지난달 장흥에서 다섯살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광주일보 2월 16일 6면) 혐의로 구속된 고모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여자아이의 친모라고 밝힌 이는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폭행 및 아동학대자 아동살인자 친고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울고 나뉘어 구분되지도 않는 5살 밖에 안된 조그마한 여자아이를 어떻게 죽도록 때릴

수 있으며 죽도록 폭행했음에도 아동폭행 아동학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사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가슴이 미어터지고 답답해 이 세상에 법과 정의가 사라진 것 같다”고 썼다.

글쓴이는 “전 남편이 지난해 7월 이혼을 요구했고 그 후 아이들은 이렇게 끔찍한 아동학대자인 고모에게 맡겨졌다”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제 딸을 때리고 학대, 살인한 고모를 아동학대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해줄것을 원한다”고 썼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겨우내 묵은 쓰레기 처리
 지난 11일 광주 북구 장동저수지 지하차도 일원에서 열린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에서 석곡동 자생단체 회원들이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상업부지, 땅
신안동,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덕남동, 임야, 투자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多
매매 - 4400만원

제일오피스텔, 급매
수기동, 33평, 사무실 전용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

오피스텔 부지
대인동, 156평,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